

에너지정책의 전환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지난해 에너지분야를 돌아보면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다. 북아프리카 민주화 사태는 아직도 국제 석유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고,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해 전력수급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에는 연말 남아공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른 국내 관련 정책과 협상전략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란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유가 대응, 지난해 에너지 분야의 충격을 흡수하는 대책 마련과 동시에 에너지믹스 정책과 기후정책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 있다.

우선 포스트 2012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캐나다·러시아·일본 등의 교토체제 탈퇴 선언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무력화 우려와 함께 우리의 감축 대응방향에도 의문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고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책적 혼선이 없도록 국민적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보다 합리적·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를 배제할 이유도 없다.

올해 우리는 원전정책을 포함해 적정 에너지믹스를 새로 도출하고 녹색성장 정책 하에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일정의 현실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믹스가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역할분담 문제라면 온실가스 감축은 적정속도를 결정하는 문제다. 일견 성격을 달리하는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이슈다. 각계의 의견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믹스의 전환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조건으로, 이를 위해 적합한 논의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일본이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시 활용한 범정부적 협의·조정과정과 사회적 논의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논의구조의 합리성·투명성이 합의 도출에 고려요소를 염두에 뒀다 한다. 이러한 논의구조를 통해 올해 에너지분야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의 전략적 특성을 감안할 때 주요 경쟁국의 논의결과를 검토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대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본격적인 논의는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도출하는 원전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지켜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